

국민 납득할 수 있겠나…정치적 사면 불가 주장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19일 광주·전남 정치권은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443일 만에 수괴 윤석열은 무기징역으로 단죄됐고, 이를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 모두’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친사를 받았다”며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듯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법상식과 법논리에 반하는 판결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내란 전당 재판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을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회성)도 자신의 SNS에 “나리를 통째로 도적질하려 한 내란범에게는 마땅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 최소한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목숨까지 잃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

‘윤 1심 무기징역’에 실망감·분노 표출 광주·전남 정치권 엄중 처벌 ‘한목소리’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까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비상계엄 해제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체포, 서울구치소 구금
	1월 19일	윤석열 구속, 서울구치소 입소
	1월 26일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검장부장판사), 구속취소 결정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5월 1일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6월 1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정식 수사 개시
	7월 10일	윤석열,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 건강 등 사유로 재판 불출석 시작
	10월 30일	윤석열, 약 4개월 만에 재판 출석
	12월 26일	내란특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내란 우두머리와 별도 재판으로 2026년 1월 16일 선고 예정)
2026년	1월 13일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
	2월 19일	법원, 1심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고는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판결이고 후대에 짐을 떠넘기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한정 파괴법을 단죄하는 역사의 법정이 마련될 때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자극히 마땅한 상식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국민을 조롱하는 자에게 사법부가 굳이 맹꽁이처럼 쥐여줬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반성 없는 내란범에게 초범 윤운하며 베푼

사법부의 암울한 온정이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 죄를 ‘촛불 훔친’ 일에 비유하는 안일함”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도 “윤석열은 현정사를 더럽힌 내란 우두머리”라며 “2심은 구형대로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사필귀경이지만 많이 아쉽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퇴행시켜 놓은 것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낮다”고 전했다.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고사인 ‘천명희희 소이불실(天網恢恢疏而不失)’을 인용한 글을 남겼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사필귀경이다”고 남겼다.

이종우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도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이 될 것이고 이 판결은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준 것이다. 지구연 재판부는 헌법과 세력에 맞선 시민들의 빛나는 저항을 배신했다. 결국 사법개혁이 절실히”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내란 친위 쿠데타를 준엄하게 단죄 못해 단 하나의 역사적 교훈도 남기지 못한 오늘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사법부는 국민적 대리를 저버린 개혁의 대상이며 자정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이상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이 대통령, 계엄 막은 국민 ‘노벨평화상’ 추천 메시지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 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정에 엑스(X·엑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 “대한민국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 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세상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곳으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같동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가 나를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제’(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의료기관 확대

종합병원까지 포함…56세 대상 내달 31일까지 소급 지원

전남도는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확대 정책과 연계해 도민의 조기진단과 치료 연계를 한 총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부터 56세(1970년생)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 지원 의료기관을 기존 병·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이다. 1회 최대 7만원을 지원한다.

C형간염 항체 검사는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검사로, 과거 감염 후 치료된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 추가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C형간염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간암의 주요 원인 질환 중 하나로 흔한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8~12주간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98% 이상 완치가 가능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전남도는 국가정책과 별도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C형간염 퇴치사업을 시작,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

과 지난해까지 2만9756명을 검사해 RNA(정밀검사) 양성자 89명을 조기에 발견했으며, 이 중 66명을 의료기관 치료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제도 확대는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도민의 검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56세는 C형간염 항체 검사가 기본 항목에 포함돼 있어, 양성 판정 시 비용 부담 없이 즉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 검사 후 종합병원급의료기관 이용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57세(1969년생)도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확진 검사비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국가정책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과 조기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심 불법 현수막 철거 19일 광주 서구청 도시공간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운전자수지 인근에서 설 연휴 기간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도심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1면 ‘윤, 무기징역’서 계속

켄텍에 ‘핵융합 초전도 도체시험시설’ 착공

120억 투입, 2028년 완공 목표…핵융합 상용화 성패 좌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구축 등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추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김용현 전 제3군사령부 현병대 장과 윤승영 전 국기수사본부 수사기획 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에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씩을 선고했다.

김 전 현병대장과 윤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전남 나주 한국

에너지공대에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체 성능을 국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6월까지 실험 동 건설을 마치고 장비를 구비해 2028년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가 내달 12일 체결할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초전도 선제 제작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핵융합로 소형화 필수 기술

인 고온초전도체 기술 개발에도 올해 21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중장기 R&D에 나선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 산학연 참여

협력 체계 구축을 완료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품질 관은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 상용화 성과를 좌우하는 난제 중 하나”라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연구인프라 확충,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리나라가 초전도체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국 핵융합연 원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KSTAR) 운영과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초전도 핵심 확보에 기여하겠다”며 “산업체와 협력해 연구성과가 실제 기술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구례 육용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도, 출입 통제·방역지역 기금농장 정밀검사

전남도는 19일 구례 육방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즉각 초등방역 조치하고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 중이다.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기축위생방역지원부 초등방역팀(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했다. 노현장 지원관 2명을 파견해 출생 원인 등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농장

방역지역(10km) 기금농장 정밀검사를 하

는 한편 주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기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능한 모든 소독 지원을 동원해 소독하고 있다.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계열

사 모든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와 함께 방역점검을 병행한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 전남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적 동종증명령을 내리고 기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 일제 소독을 실시,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19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는 44건, 전남은 나주, 영암, 곤성에서 8건이 발생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